

민 법

1. 다음 중 부양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모는 미성년인子和 같이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는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성인인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없다.
- ② 수인의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직계혈족간 혹은 기타 혈족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 ④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 있는 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며, 그 처분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부양청구권은 양도, 입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양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2. A는 자기소유의 갑건물을 B에게 임대하고, B는 A의 승낙을 얻어 갑건물을 C에게

전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건물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 C가 A에게 갑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A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건물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 C가 A에게 갑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나, B에게 C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갑건물이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되어 B가 A에게 갑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갑건물의 지붕이 강풍으로 인하여 붕괴되었다. 이 경우, C는 A에 대하여 갑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A·B간의 임대차계약과 B·C간의 전대차계약이 동시에 만료되어 C가 A로부터 갑건물의 반환을 청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건물을 A에게 반환하여 B에게 갑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B는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A는 B와의 사이에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B에게 매월 20만원을 생활보조를 위하여

무상으로 주기로 계약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A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전에 계약의 이행으로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B가 A의 처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A 자신이 그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③ B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계약에 친권자(親權者)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그것은 유효하다.
- ④ 그 계약을 한 후에 A가 사업에 실패하여 적극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A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B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B의 상속인들은 A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받았어도 정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갑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갑은 그가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갑과 병이 부부 사이이면 원칙적으로 병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병 앞으로 일단 가등기를 한 다음에 그 가등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5. 다음 중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 인한 친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를 기준)

- ㉠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 ㉡ 이해상반행위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 ㉢ 친권자가 미성년인 수인의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 ㉣ 판례는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 ㉤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6. 물권 또는 채권의 변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이 채권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갑이 을로부터 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으나 그 물건이 원래 병의 소유로서 그가 도난당한 것이었던 경우에는, 비록 갑이 선의·무과실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서는 갑으로부터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갑 앞으로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자 갑이 관계서류를 함부로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부동산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 중의 1인은 자신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 바다의 생선과 같이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된 사람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7. 법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개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자간에 사법이 적용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지배가 지배하지 않는다.
- ③ 국가의 공무원 파면은 회사의 직원 해고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 ④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 ⑤ 상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는 상법이 적용되지만, 상인의 일신상의 행위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8. 다음 중 복대리와 관련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가 B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A는 B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B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A는 그 부적임 혹은 불성실을 알고 B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② A가 B의 임의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A가 B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A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9. 19세로 아직 혼인하지 아니한 갑은 그의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을이 갑의 부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응답하라고 최고하였으나, 갑의 부모가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② 갑이 20세가 된 후에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갑은 이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자신의 매매계약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갑의 부모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들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갑이 을을 기망하여 능력자로 믿게 하였던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다음 중 그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선의인 경우.
- ②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그가 계약의 이행으로 수취한 금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악의인 때.
- ③ 주채무자가 그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물건이 이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됨으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점유자가 선의인 때.
- ⑤ 실종선고의 취소시에 실종선고를 직접의 원인으로 한 재산취득자가 선의인 경우.

11.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A는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B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의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A와 B의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2.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부인될 수 있다.
- ② 판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나고 그 시가가 올랐을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③ 권리의 행사가 비록 그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④ 자신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생활관계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타인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해당 연대보증을 대위변제하고서 연대보증한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를 기준)

- A.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B.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C.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
- D.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요 부분 중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 가분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의 취소도 가능하다.
- E.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4.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판례를 기준)

-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 B.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C.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D.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E.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D, E ② A, C, E ③ C, D ④ B, D, E ⑤ B, C

1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산으로 인하여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 ② 실종선고를 받더라도 권리능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 ③ 외국인은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내국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니다.
- ④ 이미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적 결합체(사단)라도 법인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⑤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아직 재산정리 등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16.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는 민법상의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
- ②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나 교량 등은 민법상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다.
- ③ 기업에 속하는 다수의 물건은 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지만, 법적으로는 독립한 물건의 집합에 불과하다.
- ④ 경제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물건이라도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17.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경우는?

- ①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다음 날 멸실된 경우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③ 표의자가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안 경우
- ④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 ⑤ 총을 겨누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사례]

甲은 乙과 공모하여 A 소유의 대지에 관해 乙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신뢰한 丙이 그 대지를 매수하였다.

- ① A는 丙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A가 대지를 반환받기 위해 들인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③ 甲의 행위와 丙의 손해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④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⑤ 丙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대지를 타인에게 전매하여 얻은 이익이다.

19. 다음 중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 ①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의 정신적 고통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② 성희롱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

률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③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④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 ⑤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이 추정된다.

2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약은 불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 ②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 ③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이를 반복하여 승낙한 경우에, 이로써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④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 ⑤ 물품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된다.

21.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은 단체적 성격이 약하여 조합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 결합체이다.
- ② 조합에서는 조합원 전원이 출자해야 한다.
- ③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된다.
- ④ 금전을 출자할 채무를 지는 조합원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의하여 연체이자 외에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
- 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도 행위 당시에 이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
- ②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있는 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진다.

- ③ 토지의 소유자 갑이 건축업자 을에게 건물의 신축을 맡겼는데 을의 직원이 업무중에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을 뿐만 아니라 갑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
- ④ 갑이 을을 가격하려 하자 을이 이를 피하려다 병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을은 그로 인한 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병은 그 손해를 갑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 ⑤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서도 정신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2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약혼과 관련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 ① 약혼예물이 수수된 경우,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때에도 후일 혼인이 해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②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는 파기당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도 포함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③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라고 하더라도 약혼이 해제된 때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④ 약혼단계에서의 부정도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한다.
- ⑤ 약혼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사실이 후에 밝혀지더라도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없다.

24. 다음 중 유류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
-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고,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더 이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 다음 중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 ①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②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또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 ③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 ④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해 그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한다.
- ⑤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 인지된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6. 채권자 甲은 그의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丙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판례를 기준)

- A. 丙은 乙에게 임의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B. 甲은 제3자에 대하여는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C.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D.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A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

- ① A, B
- ② C, D
- ③ A, D, E
- ④ B, E
- ⑤ B, C

27.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은? (판례를 기준)

- A.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B.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므로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C.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고, 또한 이에 관한 다른 약정도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D.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
- E.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① A, B, D ② B, C, D ③ B, D, E ④ A, C, D ⑤ C, D, E

28.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 ②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③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④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 ⑤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2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의 방해가 위법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자신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도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0.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자가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② 부동산에 관하여 1/3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③ 판례는 2/3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에, 판례는 공유자의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⑤ 공유물의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해진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31. A는 B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동시에, C에게 부탁하여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D가 A의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된 경우, C의 동의가 없으면 C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나, 매매대금채무에 관하여 성립한 B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된 경우, B의 저당권은 A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 경우, C의 동의가 없더라도 C의 보증채무는 존속한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가 된 경우, 채무인수 당시 A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D는 B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D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④ 이행인수가 된 경우, 그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B는 D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A·D간의 합의에 의하여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 경우, B가 D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우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D에게 청구하더라도 B는 D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32. 다음 중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 ① 부부의 동거의무
- 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
- ③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
- ④ 자기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채무
- ⑤ 재산목록 작성의 채무

33. 다음 중 상계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수동채권이 과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다른 종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 ㉣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 ㉤ 자동채권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4. A는 B에 대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는 A가 B에게 하여야 하지만, 같은 요건으로서의 승낙은 B가 A에 대하여 하거나 C에 대하여 하거나 관계없다.
- ② A와 C사이의 채권양도는 가장행위이었는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B가 이 사실을 모르고 C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A와 B가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더라도 C가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그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관하여 B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B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 행한 계약해제로써 C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⑤ A의 채권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하면 비록 B가 C에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어도 C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5. 이행불능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불능은 특정물채무에서 그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와 같은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 ②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후에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병 앞으로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을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 전에 갑의 채권자 병이 그 부동산을 압류하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 불능에 해당한다.
- 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36. A는 B의 부탁으로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B가 담보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C의 그 채권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B의 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그 저당권은 당연히 A에게 이전된다.
- ② C가 B에 대하여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A의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 ③ B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어도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B에 대하여 미리 구상할 수 없다.
- ④ C의 B에 대한 그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A도 이를 주장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⑤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그 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B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미리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부동산임대차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 병이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갑이 을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⑤ 동일한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 다시 을로부터 병, 다시 병으로부터 정에게 각각 매도되었는데 그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여전히 갑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정은 병, 을을 순차로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 앞으로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병을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8. A는 초등학교생이고, B는 그 감독의무자이다. A는 C의 소유에 속한 창고에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화(失火)로 창고와 창고내에 보관중인 물건을 전소시켰다. 이 사례에 관한 ㉠에서부터 ㉥까지의 기술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은?

- ㉠ A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A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 A가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B는 실화에 대하여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하더라도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A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A에게 실화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A의 감독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B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A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A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B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 A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9. 다음 중 위임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계약에는 유상의 경우와 무상의 경우가 있으나, 수임인은 유상의 경우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무상의 경우에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②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임장의 교부가 위임계약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 ③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복위임이 허용되나, 부득이한 사유만으로는 복위임을 할 수 없다.
- ④ 위임계약은 위임인 혹은 수임인의 사망 또는 파산에 의하여 종료한다. 그리고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하나,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 ⑤ 위임계약은 위임인 혹은 수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40.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기술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록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